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8. 16.(화) 06:00 < 8.16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8. 15.(월)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	책임자	과 장 황윤길 (044-203-3980)
		담당자	사무관 최재영 (044-203-3982)

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

❶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 확대, 교육 내용과 방식의 획기적 개선

- 교육대상자 전기기술인 21만명 혜택,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인하

❷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

-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(8년→3년)

□ **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산업부) **제2차관**은 8.16(화) 충남 아산 소재 **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**하여, **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**하고, 교육 관계자 등 **현장의 목소리를** 들었다.

《 현장방문 개요 》

▶ **(일시/장소)** '22. 8. 16.(화) 10시 /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(충남 아산 소재)
▶ **(참석자)** 산업부 제2차관, 에너지안전과장,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, 교육원장 등
▶ **(주요내용)** 교육 규제혁신 방안 공유, 교육현장 실태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

○ 산업부는 **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**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, 이날 방문은 **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**하여 **대국민 정책 체감도**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
《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발표 계획 》

구 분		분 야	규제혁신 과제
1탄	전기	의무교육 혁신	**<규제혁신1>** 전기안전 교육 규제 합리화(전기안전관리, 시공관리)
		업무 민간이양	**<규제혁신2>**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
2탄 (9월중)	수소	산업 활성화	**<규제혁신3>** 수소안전 규제 개선
	가스	안전규제 개선	**<규제혁신4>** 반도체 관련 안전규제 개선

□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**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,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**하는 **규제혁신을 추진**한다고 밝혔다.

◈ [규제혁신 1] 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(전기안전관리자, 시공관리책임자)

□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**단방향·주입식**(강의식) **형태의 집합교육,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**이 높지 않고,

○ **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** 등을 위한 **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**되어 왔다.

< 법정교육 관련 수요자 의견 >

◈ 교육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**단방향, 강의식** 교육이 대부분이며, 교육내용이 **기본 이론 위주로 편성**되어 있어, **실제 현장적용에 애로**

◈ 전기안전관리자가 납입하기에는 **교육비가 다소 높게**(10만원 이상) **책정**

◈ 코로나19로 인한 **'온라인 교육(일시적)'에도 교육비 전액 부과**로 불만

◈ 집합교육 참가를 위한 **원거리 이동으로 장시간이 소요**되며, 교통비 외에도 **장기 교육**(3일)에 따른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**시간·경제적 비용 부담**

◈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**현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** 발생, 타 직원 **업무 가중**

□ 이에, **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**하고 **교육환경을 개선**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, 의무교육 합리화, 경쟁체제 도입 등 **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**한다.

1. 교육내용 혁신

❶ **(교육품질 개선)**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**실무중심 교육과정***으로 개편하고 **교육기관 평가제****를 통하여 **양질의 교육 창출**

* 기초 전기공학,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, **新설비 점검 방법, 계측장비 운용, 수변전설비 조작** 등 **실무중심 과정**으로 개편하고, 우수교육생 **실습시간(2h) 단축** 등 인센티브

** **(교육기관)** 평가 결과(A~E, 5등급) 미흡[D]시 개선요청, 불량[E]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

❷ **(전문과정 개설)**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**전문교육과정을 개설**하고, **교육수료 시** 고전압·대용량 전기설비의 **전기안전관리자 선임**에 필요한 **실무경력*** **단축**(기사 : 2년→1.5년, 산업기사 : 4년→3년) 등의 **인센티브** 부여

2. 교육방식 혁신

❶ **(의무교육 합리화)** 접근 용이성,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하여 **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**하고, **교육 방법,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**하여, 교육비용은 **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** 이하로 대폭 경감

< (의무교육) 안전교육 방법·시간 및 비용 전·후 비교(안) >

교육과정(법정)		방법	시간 (h)	비용 (만원)
안전	특별(최초)	온라인 +실습	21	10.5
	기술 Ⅰ	온라인 +실습	21	10.5
	기술 Ⅱ	온라인 +실습	21	10.5
시공	안전 시공교육	온라인 +실습	21	13.2

⇨

교육과정(법정)		방법	시간 (h)	비용 (만원)
안전 · 시공	기본 (최초1회)	온라인 +실습	8	5.2 (6.6)
	심화 Ⅰ	온라인	8	5.0 (6.0)
	심화 Ⅱ	실습*	일반 8 조기퇴소 6	5.2 (6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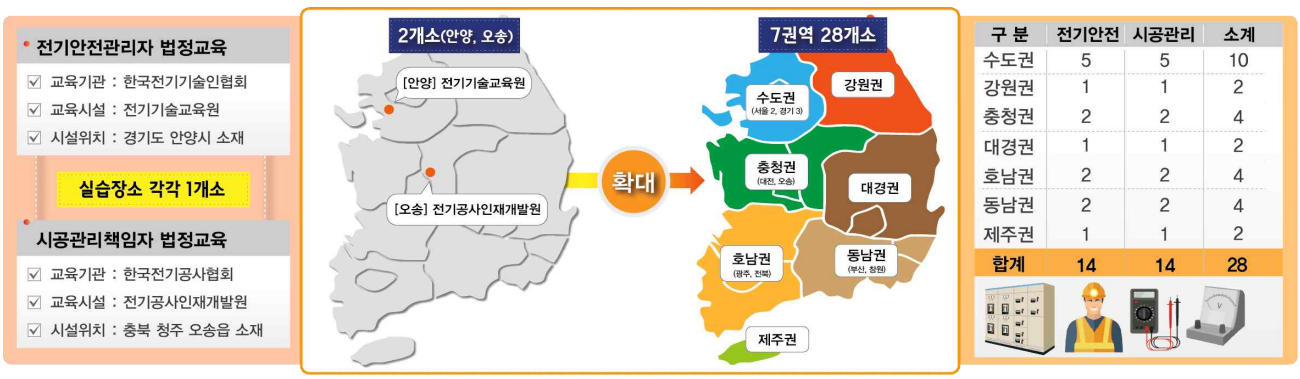
* 심화과정은 의무사항이나, 교육순서(Ⅰ,Ⅱ)는 자율적 선택 가능 / ※ ( )는 시공교육비

❷ **(모범관리자 교육면제)** 최초 선임이후, 관리 수용가 ①**무재해 기간**, 정기검사 시 ②**관리상태와** ③**점검기록 성실성**, ④**현장 불시점검**(실태조사 협조 등) **적정성 등** 평가 → 모두 만족한 경우 **'차기 교육 면제' 혜택**

❸ **(경쟁체제 도입)** **수요자의 선택권**(기관 및 교육과정 등) **보장**, **교육의 질적 향상**을 위해 **다양한 기관이 진입**할 수 있도록 **위탁기관 개방**

- **교육이수자의 편의** 도모 실습 교육은 기존 2개소(안양, 오송)에서 **7개 권역(28개소)으로 확대** ➡ 전기안전공사 **계측·실습장비 공동활용**으로 **추가 교육기관**(산업부 지정) **진입**이 용이하게 유도할 계획

< 전기분야 실습교육장 확대 개편 계획 >



구 분	전기안전	시공관리	소계
수도권	5	5	10
강원권	1	1	2
충청권	2	2	4
대경권	1	1	2
호남권	2	2	4
동남권	2	2	4
제주권	1	1	2
합계	14	14	28

◈ [규제혁신 2]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(8년➡3년)

□ 산업계에서는 그간 공적업무(법정검사 등)를 수행하는 **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*** **업무를 병행**하고 있어, **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**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,

* 전기설비의 공사·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(직접고용)해야 하나, 소규모 전기설비(1,000kW 미만)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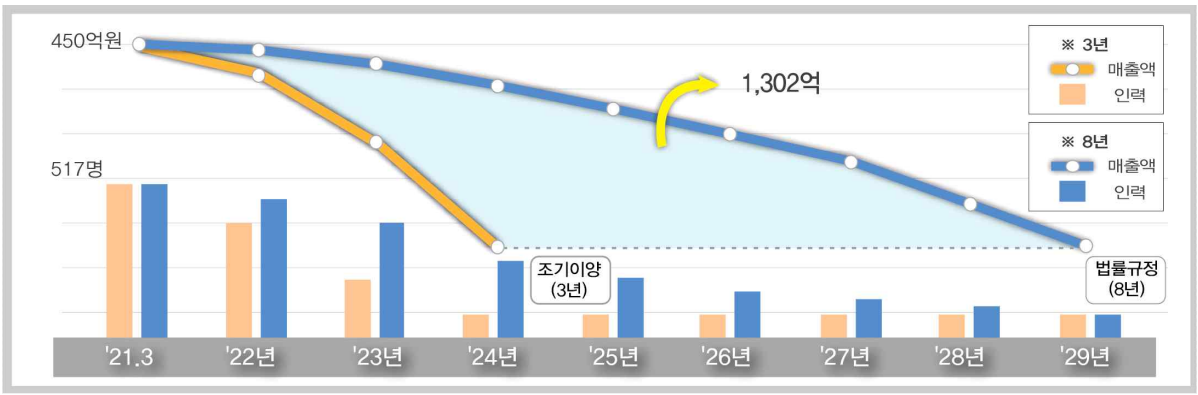
○ **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**을 위해 공사의 **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**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.

□ 이에,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**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**를 위해 **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** 법률(전기안전관리법)에서 규정*한 기간(8년 이내)보다 앞당겨 **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**을 검토한 바 있다.

* 전기안전관리법 제정·시행('21.3월)에 따라,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구도에 있는 대행업무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(8년 이내)

○ 그러나, **적극적 규제개혁,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** 및 **산업발전 견인** 등의 차원에서 **민간이양 기간을 보다 획기적으로 단축**(8년→ 3년)하기로 결정하였다.

<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창출효과 >



□ 산업부는 **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**는 물론, **부담**(교육비용, 업무공백 등)이 **대폭 경감**되고,

○ 아울러, **대행 업무 민간이양**(8년→3년, 1,302억 매출이전)을 통해 신규 **일자리 창출**(연 350명) 및 **사업 활성화**(연 350억)**에 기여**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□ 박일준 차관은 "이번 **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**을 필두로, **수요자 부담은 완화**하고, **선택권은 확대**(민간개방 등)하는 방향으로 **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**하고 있다." 고 밝히며,

○ "향후, **산업적 중요성이 부각**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**안전규제를 합리화**하고 **신산업 육성**을 적극 지원하여, **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**을 도모할 예정" 이라고 말했다.

【붙임】 전기분야 교육 규제혁신 주요내용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전기안전 교육 규제혁신 주요내용**

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 규제 혁신

산업통상자원부

EDUCATION

1 전기안전관리자 교육

2 시공관리책임자 교육

현 실태
- 집합교육(21h) 형태의 주입식 교육, 시간 · 경제적 비용 부담 등
- 독점수행으로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및 유인책 부족

불만 제기 등 민원 과다 발생

내용혁신

01 교육품질 개선

-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**실무 중심**의 실질 · 효율적 교육 시행
  - ☑ 교육 우수자 실습시간 단축(8→6h)
- **위탁 교육기관**의 교육 내용 및 수준, 만족도 등 **평가**
  - ☑ 적합성 평가제(5등급) 도입
    - 미흡(D등급) : 개선 및 시정 조치
    - 불량(E등급) : 위탁기관 지정 취소 등



02 전문과정 개설

-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**'전문 교육과정'** 개설



인센티브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
  * (전기기사) 2년 ➡ 1.5년 / (산업기사) 4년 ➡ 3년

방법혁신

규제 혁신

03 의무교육 합리화

- 이론교육은 모두 **온라인 전환**



- **교육시간 및 비용** 합리적 개선
  - ☑ 교육시간 : 3일(21h) ➡ 1일(8h)
  - ☑ 교육비용 : 절반수준으로 경감

04 모범관리자 교육면제

- 최초 선임(전기안전관리자) 이후, 전기안전관리 모범 운영시 **차기교육 면제**

<평가 항목>
- ☑ 사업장의 무재해 기간
- ☑ 관리상태, 점검기록 성실도
- ☑ 현장 불시점검(실태조사 협조)



05 교육 경쟁체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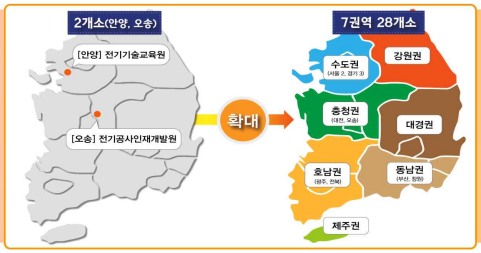
☑ 실습 교육장소 확대 / 2개소 ➡ 7개 권역, 28개소

-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,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위탁기관 개방

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
- 교육기관 : 한국전기기술인협회
- 교육시설 : 전기기술교육원
- 시설위치 : 경기도 안양시 소재

실습장소 각각 1개소

시공관리책임자 법정교육
- 교육기관 : 한국전기공사협회
- 교육시설 : 전기공사인재개발원
- 시설위치 : 충북 청주 오송읍 소재



구 분	전기안전	시공관리	소계
수도권	5	5	10
강원권	1	1	2
충청권	2	2	4
대경권	1	1	2
호남권	2	2	4
동남권	2	2	4
제주권	1	1	2
합계	14	14	28